



[2023 SUSREG 평가서 보고서 요약]

WWF 금융감독기관의 지속가능금융 성과를 분석한 2023년 SUSREG 보고서 발간

- G20 및 고소득 국가들, E&S에 대한 미시적·거시적 건전성 감독 정책 부진
- 탄소배출 상위 2개국, 기후 대응 금융정책 부진, 역사적 배출 책임 다 해야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인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이하 WWF)은 한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47개 국가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의 지속가능금융 성과를 분석한 2023년 SUSREG(Sustainable Financial Regulations and Central Bank Activities,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 지속가능금융 평가) 보고서 발간하였다.

SUSREG 평가 보고서는 각국 금융당국의 기후, 환경, 사회 요인의 통합 성과를 진단하고, 상호 우수사례를 공유, 벤치마킹함으로써, 금융감독기관이 지속가능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된 SUSREG 평가에서는 Paraguay, Slovenia, Türkiye 3개국이 추가되었으며, 수자원 및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금융정책의 반영 여부, 중앙은행의 환경 침해 산업에 대한 점진적 자금지원 중단 계획, 중소기업이 환경과 사회 리스크를 경영에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정부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에 있어 관련 모범 기준, Taxonomy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6개의 새로운 평가 항목이 신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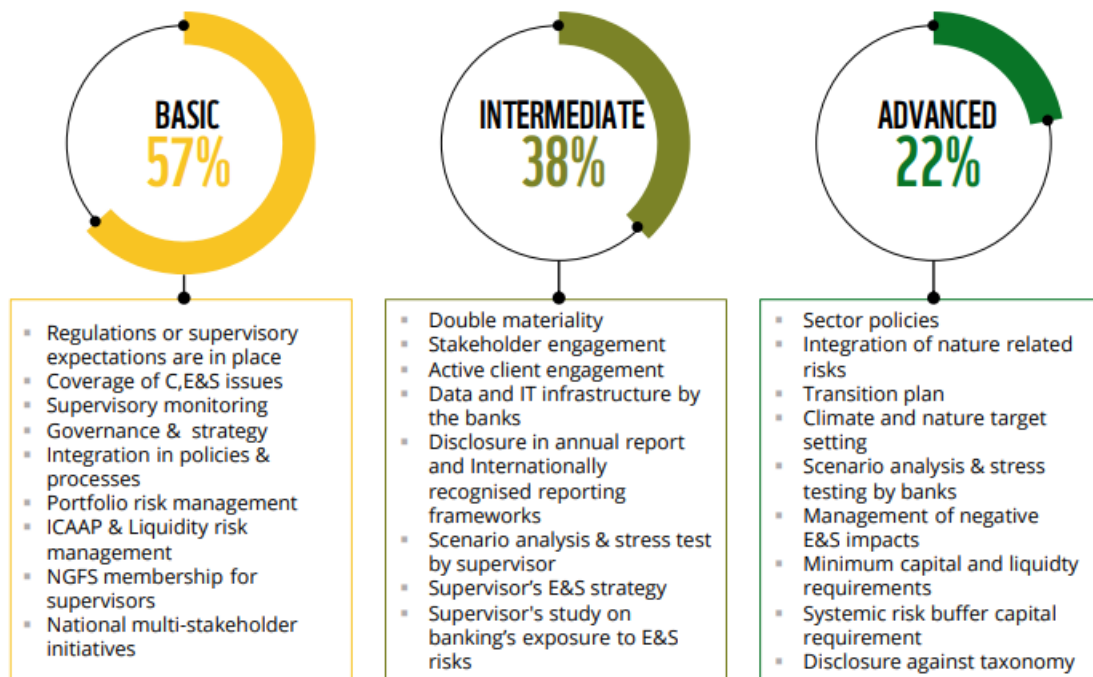
금융감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E&S(환경&사회) 금융정책 수립 필요

이번 평가에서는 전세계 47개 금융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의 E&S 정책통합 수준을 정책 난이도에 따라 Basic, Intermediate, Advance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Basic은 57%, Intermediate 38%, Advance 22%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과 전략 등은 과반수 이상 실행하고 있으나, double materiality, client engagement, scenario analysis 등의 Intermediate 수준의 은행감독은 38%만 실행되고 있으며, stress testing과 같은 Advance 영역에서는 22%만 실행되어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금융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금융정책의 강도를 높여 Intermediate, Advanced 평가 항목들에 대한 달성이 필요하다.

FIGURE 1: SUSREG BANKING SUPERVISION INDICATORS PROGRESS FOR CLIMATE & ENVIRONMENT ACROSS THREE DISTINCT CATEGORIES



Note: The number displayed on the graph represents the average score for climate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excluding social assessment. In cases where an indicator is divided between climate and environment, the results were given equal weight. Partially met criteria allow for a 50% score, while fully met criteria result in a 100% score



G20 국가, 은행 감독에 있어 E&S에 대한 미시적·거시적 건전성 감독 정책 부진

경제적 영향력이 큰 G20 국가들의 은행감독정책을 살펴보면, E&S와 관련된 은행의 거버넌스, 전략, 포트폴리오, 정책과 절차 등에 대한 감독정책은 많은 부분 시행이 되고 있으나, 감독당국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사전규제(Rule based Regulation) 및 사후규제(Principle based Regulation)를 활용하도록 권고 있는 규제자본, 유동성 비율, 신용집중위험 한도와 같은 미시건전성규제(rule based micro-prudential supervision)에 대한 G20 국가 금융감독당국의 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S와 관련된 위험을 자본 및 유동성 비율로 전환함에 있어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와 관련 제도(서비스)의 도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독당국에 의한 scenario analysis, stress tests, exposure limits 등 거시건전성규제(macro-prudential supervision)에 대한 성과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India, Indonesia, Türkiye를 포함 몇몇 국가들은 거시건전성규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정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 INDICATORS FULFILMENT PER CATEGORY IN G20 COUNTRIES

	MICROPRUDENTIAL (SUPERVISORY EXPECTATIONS)	MICRO-PRUDENTIAL SUPERVISION (RULE-BASED)	DISCLOSURE & TRANSPARENCY	MACRO-PRUDENTIAL SUPERVISION	LEADERSHIP & INTERNAL ORGANIZATION	ENABLING ENVIRONMENT
AUSTRALIA	32%	13%	14%	21%	44%	27%
BRAZIL	78%	63%	50%	46%	61%	52%
CANADA	33%	25%	25%	17%	22%	50%
CHINA	50%	0%	25%	17%	6%	42%
EU	84%	75%	69%	38%	75%	73%
FRANCE	61%	13%	64%	58%	44%	63%
GERMANY	73%	50%	67%	46%	61%	75%
INDIA	36%	6%	31%	0%	31%	60%
INDONESIA	53%	0%	44%	0%	61%	55%
ITALY	72%	63%	64%	25%	72%	63%
JAPAN	36%	0%	25%	25%	56%	52%
SOUTH KOREA	35%	0%	8%	25%	39%	50%
MEXICO	28%	0%	11%	21%	39%	48%
SOUTH AFRICA	36%	6%	39%	13%	56%	50%
TÜRKIYE	36%	13%	22%	0%	22%	42%
UK	37%	25%	17%	33%	58%	54%
USA	18%	13%	6%	4%	42%	46%



Key Indicator에 대한 정책 입안 부진

SUSREG 평가는 DOUBLE MATERIALITY, NATURE RELATED RISKS, CLIMATE & NATURE TARGET SETTING, CAPITAL & LIQUIDITY REQUIREMENTS 등을 Impact측면에서 주요 평가항목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DOUBLE MATERI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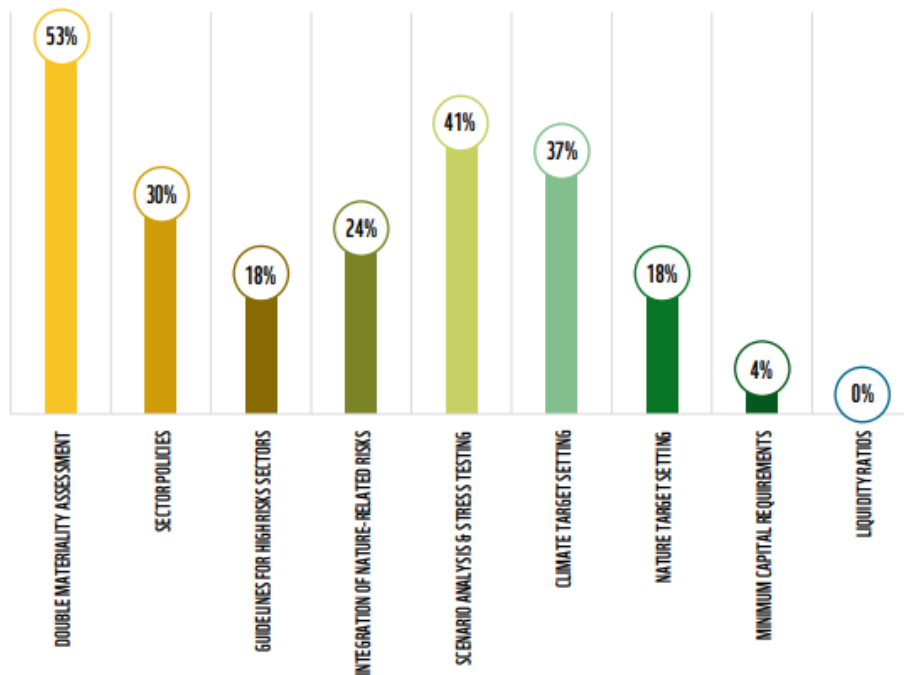
이중 중요성 평가를 수행할 때 금융기관은 해당 기관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impact materiality)과 사회와 환경이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financial materiality)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33개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부분적인 기대치(기후, 환경, 사회에 대한 개별적인 outside-in 방식의)만 갖고 있거나 전혀 기대치가 없는 국가도 있다.

GUIDELINE ON HIGH-RISK SECTORS

E&S 관련 고위험 섹터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특정 지침이나 체크리스트를 발행한 국가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주요 고위험 부문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유일한 국가들이다. 나머지 대부분 국가들은 해당 부문에 대한 목록만 언급하거나, 제한적으로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7: KEY INDICATORS ASSESSMENT OF BANKING SUPERVISION - ACHIEVEMENT OF 45 COUNTRIES



Note: The number displayed on the graph represents the average score for climate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excluding social assessment. In cases where an indicator is divided between climate and environment, the results were given equal weight. Partially met criteria allow for a 50% score, while fully met criteria result in a 100%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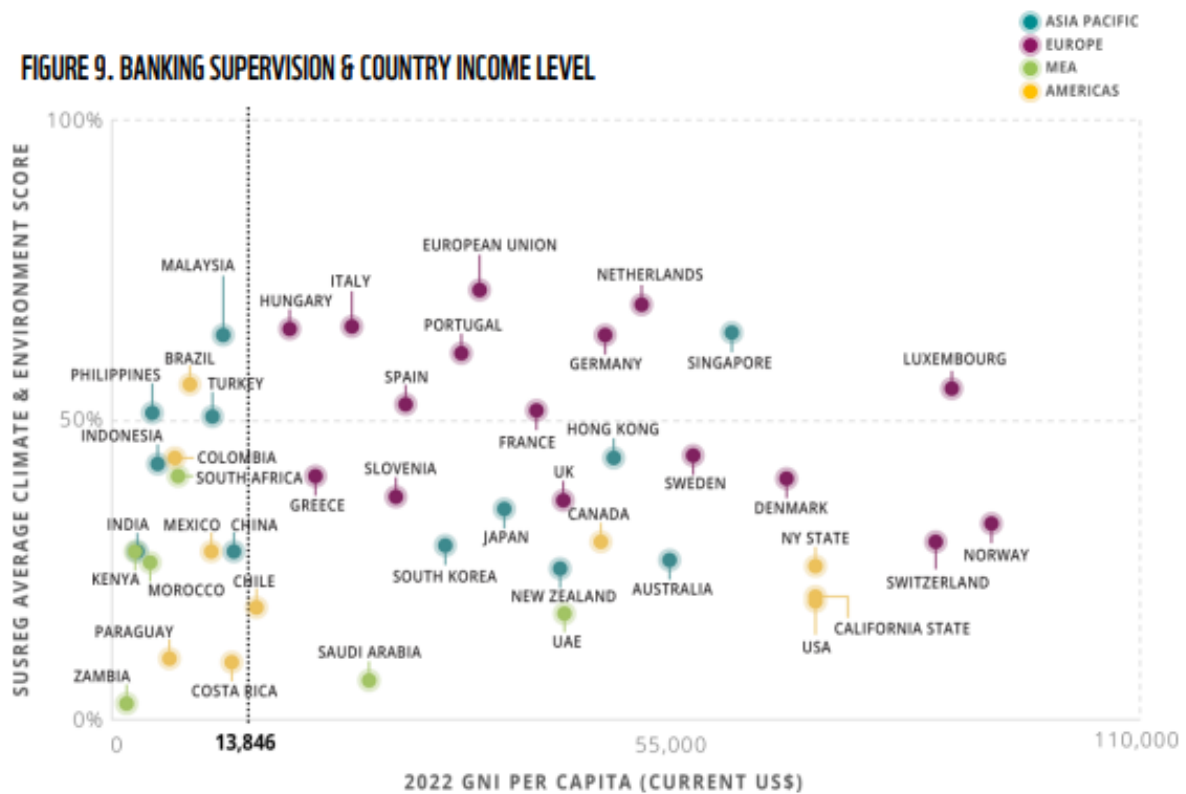
고소득 국가들의 기후, 환경에 대한 금융감독정책 입안을 위한 노력 절실

세계에서 부유한 5개국 중 4개국과 전체 고소득 국가 중 68%가 기후 및 환경에 대한 적절한 은행 감독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소득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 자원을 기반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모순적으로 이들 고소득 국가들은 SUSREG 평가에 있어 대부분 50% 미만의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반면, 네덜란드, 독일, 포르투갈, 헝가리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은행 감독 정책을 통해 기후 및 환경 위험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간 소득 국가들인 브라질, 말레이시아와 같은 소수의 국가들도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9. BANKING SUPERVISION & COUNTRY INCOME LEVEL



Source of GNI per capita: The World Bank, 2022

GNI per capita (formerly GNP per capita) is the gross national income, converted to U.S. dollars using the World Bank Atlas method, divided by the midyear population. For the current 2024 fiscal year, high-income economies are defined as those with a GNI per capita, calculated using the World Bank Atlas method, of \$13,846 or more in 2022.

Note: We use the average of SUSREG climate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under this graph. California and New York are attributed the same GNI as the USA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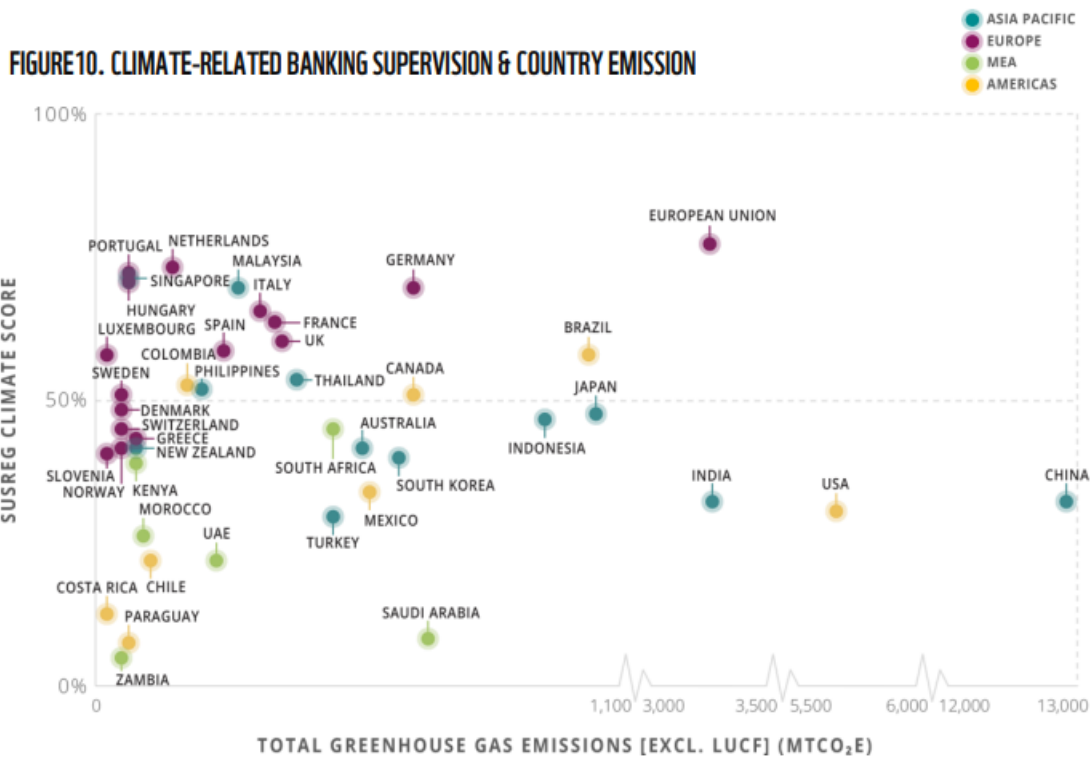


탄소배출 상위 2개국, 기후대응 부진, 역사적 배출 책임 다 해야

이번 SUSREG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계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들의 은행 산업에 대한 기후 관련 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없다면 고탄소배출과 환경적으로 유해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 이들 고탄소배출, 환경 유해 산업의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 고탄소 배출 국가들의 보다 강력한 금융감독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양대 고탄소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은 모두 SUSREG 평가 기준 50% 미만으로, 은행 부문에 대하여 저조한 기후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전 세계적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의 금융시스템을 기후 목표와 일치시켜야 하고, 현재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고려할 때, 역사적인 배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에 따르면, 부유하고 선진화된 23개국 이 모든 역사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의 절반에 대해 집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Source of country 2022 emission: The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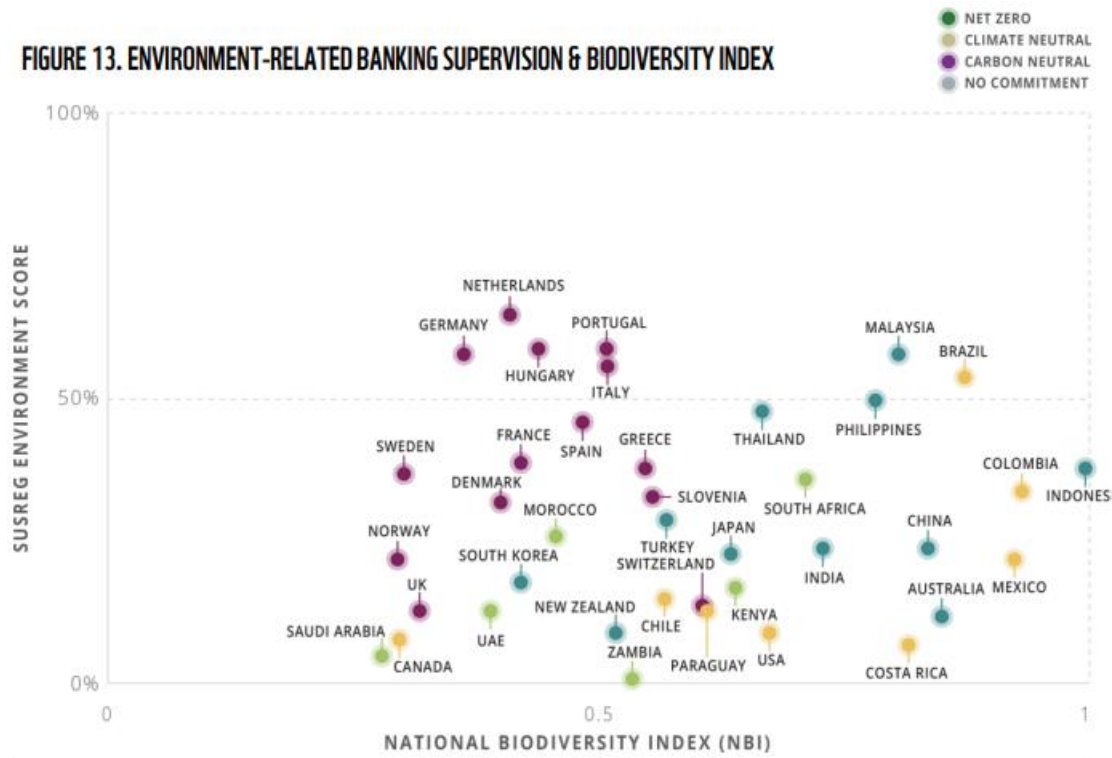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들의 생물다양성 금융정책 여전히 부진

현재 환경 관련 은행감독은 대부분 기후 관련 문제에 초점이 맞추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예: 탄소 흡수원)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자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서명국은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최소 30%를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이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 광범위한 환경 위험에 대한 은행의 감독 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에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의 은행감독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FIGURE 13. ENVIRONMENT-RELATED BANKING SUPERVISION & BIODIVERSITY INDEX



Source of National Biodiversity Index: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Note: The National Biodiversity Index (NBI) is based on estimates of country richness and endemism in four terrestrial vertebrate classes and vascular plants; vertebrates and plants are ranked equally; index values range between 1.000 (maximum: Indonesia) and 0.000 (minimum: Greenland, not shown in table). The NBI includes some adjustment allowing for country size. Countries with land area less than 5,000 sq km are excluded. Overseas territories and dependencies are excluded from this column.



국내 평가 Highlights

2021년 녹색금융추진계획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2023 SUSREG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정책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금융정책은 궁극적으로 기업과 산업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할 것이다.

이번 SUSREG 평가는 G20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국가, 고소득 국가들의 성과를 따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탄소중립산업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강화되는 ESG 공시(Disclosure) 제도 등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금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안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로부터 파생되는 전환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SUSREG E&S 스코어가 50% 미만으로 저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할 것이다.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은 점점 옥죄어오고 있는 각종 글로벌 규제에 대하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23년 국내 금융당국의 개선 노력

금융감독원,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 개정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기대치 상승

이번 평가에서 금융감독원은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을 새롭게 개정하여 BCBS¹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을 최대한 지침서에 반영하고, 신용·시장·유동성·운용 리스크와 함께 기후리스크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고, 자본·유동성 적정성 평가에도 기후리스크를 반영토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사회 및 업무집행책임자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할, 내부통제 시스템, 보유 포트폴리오에 대한 환경, 사회 리스크에 대한 측정화 관리 등에 대하여 그 관리 방법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높은 기후리스크를 가진 고객이나 부문별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며, 기존 지침에서 '할 수 있다' 등 선택형으로 표현된 내용들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형 표현으로 대체하여 기후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이 사업계획 및 리스크 관리 전반에 기후리스크가 미치는 중요한 영향과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의 손실에 대한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후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의 기대치를 점진적으로 높

¹ BSBC(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Principles of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management and supervision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이사 및 업무 집행 책임자에 대한 기대치는 다음과 같다.

[이사 및 업무 집행 책임자의 기후리스크 관리]

- 금융회사가 전략, 사업 계획 및 리스크 관리 방식 수립 시에 기후리스크 고려
- 기후리스크 및 이에 따른 기회를 식별하고, 식별된 리스크 및 기회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
- 기후리스크에 따른 영향 평가 시 단기 및 장기를 모두 고려
- 국제협정이나 정부의 기후리스크 관리 목표 2050 탄소중립 전략, 한국형 뉴딜 정책,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에서 설정한 기후리스크 관리 목표에 금융회사가 적절히 부합하고 있는지 고려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ESG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One-stop) 조회할 수 있는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 국내 ESG 확산과 투자 규모를 늘림에 맞춰, ESG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편의성 제고가 기대되어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2023 SUSREG 평가보고서 권고사항

기후·자연 리스크를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의 고유목표 및 전략에 통합

과학기반 기후·환경 리스크 설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과 완전한 생물다양성 회복(full biodiversity recovery)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정량화 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S에 대한 금융정책을 강화하고, 임팩트를 고려한 최우선과제들을 선정

미시적 및 거시적 건전성 규제 설정 시 예방적 접근 방식 채택: 금융감독당국은 불확실하고 잠재적으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적 조치는 (a)기후·환경 유해 활동 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자본건전성 요건 요구, (b) 기후·환경 유관 concentration risk에 대한 미시·거시적건전성 규제 강화, (c)기후·환경에 기인한 신용, 시장, 운영 리스크 완화 조치, (d)관련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 및 감독 요구 사항 마련 등을 있다.

기후 및 자연 목표 설정 의무화: 금융기관에 (a)파리 협정 및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중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 (b)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널리 받아들여지는 과학 기반 시나리오를 사용, (c)일관성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목표 검토. SBTi, SBTN 등 설정 목표 포함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 및 자연 전환 계획을 의무화 및 기업의 전환 계획 공개 지원: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은 (a)금융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기후 및 자연 전환 계획을 개발하고 공개하도록 요구, (b)금융기관에게 고객사(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을 공개하도록 촉구하도록 권고, (c)금융기관 및 기업의 전환리스크를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전환계획의 수립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Greenwashing 방지: 금융감독당국은 증가하는 Greenwashing 위험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보유 포트폴리오 중 얼마나 많은 자금이 환경친화적, 또는 환경유해 활동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통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대치를 설정: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데 있어서의 자연(Nature, Biodiversity)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해야 함. 금융 기관은 (a)자연에 대한 영향과 의존성을 식별하고 매핑, (b)건고한 고객 실사를 통한 위험 평가, (c)자연 관련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측정 기준 설정, (d)자연기반솔루션(NBS)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사업에의 자금 유입 전략 개발, (e)TNFD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자연 관련 위험 및 완화 노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금융감독당국은 고위험 부문 및 주제별 세부지침 발행과 관련 시나리오 수립을 고려해야 한다.

보다 견고한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통해 현실적인 기후 리스크를 측정, 자본 및 유동성 비율 및 금융감독당국 정책에 반영: 현재 사용되는 많은 기후 시나리오 모델은 기후 위험을 상당히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는 금융 기관과 정책 입안자를 잘못된 안전감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위험 동인, 불확실성 및 기후 위험 영향의 전체 스펙트럼을 보다 정확하게 포함하기 위해 기후 위험 모델 및 시나리오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 감독자는 이후 이러한 평가 결과를 기타 감독 요구 사항과 함께 자본 및 유동성 비율의 틀로 변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비즈니스 모델, 노출 프로필(exposure profile) 및 위험 관리에 보다 탄력적인 완충 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

보험업 감독에 있어 인수 및 투자 활동 모두에 대한 일관된 적용: 현재 E&S 문제에 대한 보험 감독은 인수보다는 투자 활동에 중점.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보험사의 대차대조표 양쪽 모두에 대해 감독 기대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a)자체위험지급능력평가(ORSA)에 E&S 고려 사항을 포함, (b)높은 E&S 기준을 준수하는데 보험고객 및 피투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참여 및 지원, (c)보험 가격 책정에 E&S 위험 요소를 고려, 보험료가 환경 및 사회 위험과 관련된 금전적 손실 위험을 반영하도록 보장, (d)기후 및 자연 위험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상품을 개발, (e) 심각하게 환경피해를 주는 경제 활동에 대한 모든 보험 서비스 즉시 중단, (f)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050년까지 Net Zero 배출 시나리오에 맞춰 화석 연료 관련 투자의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모든 통화 정책 도구에 환경적, 사회적 고려를 통합: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반영하고 그들의 조치가 저탄소배출과 네이처 포지티브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환경적, 사회적 고려 사항을 중앙은행의 기업 자산구매 프로그램, 담보체계, 외환보유고 관리, 녹색보조금 대상 대출 및 준비금 요건 조정 등이 포함된다.



중앙은행 포트폴리오에서 환경에 가장 유해한 섹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유 포트폴리오가 기후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 중앙은행은 1.5°C 목표와 궤를 같이하기 위해 이중 중대성 원칙에 입각한 보유 포트폴리오의 기후 영향을 공개하고, 이어서 빠른 화석 연료 배제 정책 수립, DCF(deforestation and conversion free) 기준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포트폴리오의 생물다양성 임팩트에 대한 공개 등이 요구된다.



“WE OWE IT TO OURSELVES AND TO THE NEXT GENERATION TO CONSERVE THE ENVIRONMENT SO THAT WE CAN BEQUEATH OUR CHILDREN A SUSTAINABLE WORLD THAT BENEFITS ALL.”

PROF WANGARI MAATHAI | NOBEL PEACE PRIZE WINNER

[Contact Point]

WWF Korea

15F, Standard chartered Bank Building, 47 Jong-ro, Jongno-gu, Seoul, South Korea

DongLim Chung / 정동림

Sustainable Finance Programme / Sr. Officer,

E-mail: dchung@wwfkorea.or.kr

Tel. 070 7434 4251